

# 정책동향

## 산업자원부, 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

산업자원부는 최근 난연케이블의 시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기설비 기술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내용으로는 지금까지 난연성 케이블의 기술 수준은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해 저압 고압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시험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세분화해 고압의 경우 시험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압별로 시험기준을 달리했다.

전력설비 사고중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MOF(계기용 변성기)는 전기적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기계

적 강도를 기술기준에 반영하고, 이미 설치된 제품 중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교체 설치도록 했다.

또 도심지 등에 설치된 원형지지물(강관주)을 철탑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강관주의 경우 검사기준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안됐으나 이번에 이를 철탑에 포함시켜 강관주의 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경간(철탑간의 거리)을 줄여 관리를 강화했다.

## 관세청, 수출입업체의 금융부담 완화 위해 신용담보제 개선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신용담보 한도액 설정기준을 개선했다.

관세청은 종전에는 최근 3년 동안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중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등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제조업체 확인시 공장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해왔으나 앞으로는 공장등록증을 갖추기 어려운 해외 임가공업체, 벤처업체 등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장등록증 확인을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제조업을 확인함으로써 신용담보업체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특히 공공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자

회사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을 허용, 공공성이 있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정부투자기관의 신용등급이 우수한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나 외국인투자기업, 제조업체 연구소만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관세청은 신용으로 통관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할 때에도 획일적으로 전년도 제세 납부실적과 환급 실적 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던 방법을 바꿔 최근 실적 증가세를 반영,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업체에 유리한 경우에는 신청날의 전월부터 기산하여 이전 1년간 실적 등을 기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가로등용 분전함 KS규격 제정

도로변·가로변·아파트·공공위락시설 주변 등에 설치된 가로등 분전함에 대한 국가표준(KS)이 제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작년 여름 가로등 시설이 집중호우로 침수돼 누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로변 등에 설치된 가로등의 전기안전관리와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분전함을 KS규격 품목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로등용 분전함 KS규격에는 지상에 설치돼 있는 분전함내에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해 누전에 의해 인체에 전류가 흘러도 인체내의 통전전류치가 최대 30mA 이상이

되면 분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 자동차단되도록 설계해야한다.

또 관리청인 자치단체에서 1개 분전함에 과도한 가로등을 연결, 과부하가 걸리거나 예민하게 누전차단기가 작동해서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설전류가 최소 20mA 이상이 되어야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도록 하고 1개 누전차단기당 가로등을 10개 이상 연결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가로등은 42만개가 설치돼 있으며, 지금까지는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설계기준이 달랐다.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예산 상반기중 58% 진행

산업자원부는 수출지원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일반·재특회계 관련예산의 57.7%를 상반기중에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조원 규모의 산업기술 예산은 예년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작년 11월부터 2002년 사업에 착수, 계획을 완료하고 연초부터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연구용역과 시범재래시장 수요조사를 마친 신규 지역산업진흥사업(600억원 규모)과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26억원 규모)도 이달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무역기반조성·수출보험출연·외국인 투자유치 등 무역투자관련 사업은 5천223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중 76%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세입실적에 따라 집행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투자계정(1조1천억원 규모)은 세입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용자계정(1조원규모)은 연초에 용자추천과 용자사업자 대출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구조고도화사업 등에 쓰여질 3천347억원 규모의 산업기반기금은 이달부터 용자추천과 함께 대출을 실시한다.

## 단체수의계약물품 149개 최종 확정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54개에 5개가 축소된 149개의 2002년도 단체수의 계약물품과 128개의 중소기업간경쟁물품을 지정 공고했다.

물품지정의 세부내역을 보면 편중배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5개 품목은 지정에서 제외했으며, 수도미터등 3개 품목을 신규지정했다. 또 조명은 물품통합에 따라 3개 품목이 줄어들었다. 전기공업계의 경우 전기조합과 전선조합은 지난해와 같은 4개 품목이 단체수계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계량계측기조합의 경우 수도미터가 새로 포함돼 1개 품목에서 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또 조명조합의 경우 가로등기구, 안정기, 방전등 램프가 가로등기구 한품목으로 통합돼 실질적으로 품목은 5개에서 2개로 축소됐으나 물량은 지난해와 같아 업계에 미칠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자동제어조합과 전등기구조합이 지난해와 같은 품목을 유지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편중배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품목 5개를 단체수계에서 제외했으며, 앞으로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지정에서 배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 한국전력의 고마크가 e마크로 흡수·통합

한국전력공사의 고마크가 에너지관리공단 e마크로 흡수, 통합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올해부터 고마크를 e마크로 통합, 단일 규정체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이번 마크 통합으로 고마크만을 취득한 업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뒤 6월 30일까지 e마크를 획득토록 하고 동일한 시험항목은 면제해줄 방침이다.

고마크와 e마크가 단일 규정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마크 신청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자부는 e대상품목에 대한 리베이트를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위해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리베이트 운영규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전에서 별도의 마크를 제작, 부착해 리베이트를 통해 설치된 제품임을 표시할 계획이다.

새롭게 만들어질 마크는 현재 한전기금운영실에서 준비중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마크와 e마크가 통합됨에 따라 신청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업체들의 이중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리베이트대상품목도 확대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활성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청, PL정보방 개설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제조물책임(PL) 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PL 대응능력을 지원키 위해 홈페이지(www.smba.go.kr) 내에 PL정보방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공급업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제품공급시점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중기청은 PL정보방을 통해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국내외 판례,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방안, 정부의 제조물책임 지원시책, 제조물책임 보험가입 안내, 제조물의 결함원인 규명기관 안내, 제조물책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중기청은 이외에도 앞으로 업종별 PL 대응방안 등 새로운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 고효율기자재 품목 22개로 확대

산업자원부는 반도체 기술을 접목한 LED(반도체 발광소자)교통신호등을 비롯한 고효율 인버터·난방용 자동온도 조절밸브 등 3개 품목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은 모두 2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LED교통신호등은 제품자체에서 빛을 내는 반도체 발광소자를 이용한 신호등으로 백열전구 보다 수명이 길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약 85%에 달하는 차세대 교통신호등이다.

국내에는 현재 28만여개의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호등 등수는 80만개 정도로 이를 LED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208GWh(114억원

규모)의 전력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효율 인버터는 입력 전력을 인버터 내에서 전압과 주파수를 가변시켜 전동기에 공급함으로써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전력 사용량의 약 30% 이상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밸브의 경우도 약 30% 이상의 난방에너지 절약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산자부는 이번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추가에 덧붙여 근본적인 에너지 수송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용 의무화 △자금 및 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기기 비교전시회도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자원부,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수급안정대책 마련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의 전력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전력수급안정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전력수급안정대책은 ▲용량시장제도 도입 ▲대기업진단 참여 제한완화 ▲자가발전사업 활성화 ▲계약제도 활성화 ▲발전소 건설 지연 방지대책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구조개편 차질없이 추진해 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발전소 건설 촉진으로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은 각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고 특히 캘리포니아 전력사태의 교훈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전력수급안정대책으로는 구조개편 이후 발전소 건설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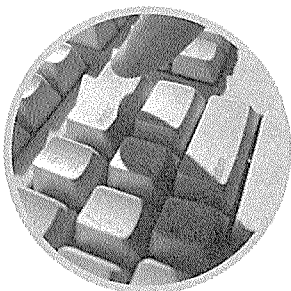
긍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구조개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시행중인 용량시장제도를 도입해 판매사업자에게 최대수요의 적정 비율을 예비율로 확보토록 함으로써 발전사업자가 수요에 맞추어

발전소 건설을 유도했다. 또한 발전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진단의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의 예외사항에 발전사업을 추가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가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연간총생산량이 30% 미만으로 되어 있는 자가발전사업자의 잉여전력 판매규모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우선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시장가격과는 별도로 미리 정한 고정가격에 의해 정산토록 하는 차액계약제도와 같은 장기계약제도를 활성화해 급격한 가격변동 위험으로부터 발전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전사업자가 허가받은 발전소 건설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발전소건설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와 같은 전력수급 불안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omepage - <http://www.koema.or.kr>

